

전기차도 5단계 에너지효율 표시한다… “고효율 개발 촉진”

오늘부터 1~5등급 표시 의무화
전기차 모델중 2.2%만 1등급 표시
1등급, 현대차·테슬라 포함 6개

4월부터 국내 모든 전기차에 5단계의 에너지효율 등급 표시가 의무화된다. 전기차 모델 중 2.2%만 에너지 효율이 가장 좋은 1등급으로 표시된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전기차 에너지효율 등급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국내 신고된 시판 중인 모든 전기차 278개 모델에 5단계 등급으로 구분된 전기차 등급 라벨이 부착된다.

전기차 에너지효율 등급제는 산업부 고시에 따라 지난해 9월 1일부터 이달 말까지 신규 전기차 모델에만 적용됐고, 4월부터는 기존 전기차 모델에도 적용된다.

전기차 에너지효율 1등급에 해당하는 전기차 모델은 현대차(아이오닉3개 모델), 테슬라(모델3 2개 모델), 스마트솔루션스(1개 모델) 등 6개 모델로 전체 전기차 모델 중 2.2%에 해당한다.

이어 2등급 54개 모델(19.4%), 3등급 73개 모델(26.3%), 4등급 83개 모델(29.8%), 5등급 62개 모델(22.3%) 순이다.

1등급 전기차는 킬로와트시(kWh) 당 5.8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다. 2등급은 5.7~5.0km/kWh, 3등급 4.9~4.2



현대차 아이오닉 6.

km/kWh, 4등급 4.1~3.4km/kWh, 5등급 3.3km/kWh 이하다.

최근 전기차 등록 대수와 등록 모델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등급제 시행으로 고효율 전기차의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전기차 등록 대수는 2019년 8만9000대에서 2023년 54만4000대로, 등록 모델은 2019년 27개 모델에서 2024년 278개 모델로 급증하고 있다.

전기차 에너지효율 1등급에 해당하는 아이오닉6의 연간 충전요금(연간 주행거리 1만3323km 가정시)은 약 78만원으로 5등급 전기차의 충전요금(약

162만원)에 비해 약 84만원 가량 저렴하다.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1642.98원으로 가정하면, 내연기관차(약 203만원), 하이브리드차(약 156만원)의 연간 평균 연료비와 비교해 절반 이하로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고효율 전기차에 대한 업계의 기술 개발 촉진과 소비자 선호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전기차 시장 동향, 제도 시행 성과 등을 분석해 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안전보건공단

방문판매 점검원에도 맞춤 안전보건정보 제공

안전보건공단 스마트안전보건기술원은 방문판매 점검원에도 ‘직종별 플랫폼 재해예방 시스템’을 활용한 맞춤형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플랫폼 종사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정보공유 플랫폼으로, 지난 2020년부터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에 재해예방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방문판매 점검원의 경우, 이동이나 점검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노출돼 있으나, 이동노동이라는 특성상 정보 제공이 제한적이었다.

앞으로는 방문판매 점검원이 업무 시작 전 업무용 앱을 켜면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날씨·요일에 따른 15초 분량의 안전교육 영상이 자동 재생된다.

또 조건별 송출 알고리즘을 통해 가장 필요한 안전보건대책·기상별 안전 행동요령 등의 영상을 볼 수 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직종별 플랫폼 재해예방 시스템(<http://service.kosha.or.kr>)에 접속해 인증키를 받아 해당 업무용 앱에 적용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 별도의 업무용 앱 변경 없이도, 스마트폰에서 직접 주소로 접속해 공단 시스템의 ‘스팟교육영상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현재 위치 기반 영상도 바로 볼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지역맞춤 고용촉진장려금 실시 사업주에 1인당 720만원 지원

고용부, 서울남부고용센터 등 5곳 여성가장 등 집중취업지원서비스제공

지역 고용상황에 맞춘 취업취약계층 대상 고용장려금 제도가 시범 실시된다.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최대 720만원이 지원된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전국 5개 고용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역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시범사업은 광주·안양·전주·서울남부·청주 등 5개 고용센터에서 시행되며, 지역 상황에 맞는 취업취약계층을 추가로 선정·발굴해 집중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한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은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등이다.

지역별 사업을 보면, 광주고용센터는 대우위니아 계열사 등 가전제조업의 경영악화 및 지역 내 건설업 위기 심화로 인한 대량 고용변동 상황 발생에 대비, 광주시·광산구청 등과 협업체 기업의 위기관리 지원 및 이직자 발생 시 신속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양고용센터는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에게 일을 통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주고용센터는 지역



지난 3월 26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열린 2024 인천공기업·우수기업 청년취업 설명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업체 부스에서 전형 일정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뉴시스

7개 가족센터와 연계해 관내 거주 결혼 이민자 중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언어·직장문화 교육 등과 병행한 집중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남부고용센터는 관할지역인 양천구 및 강서구 지역 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상당수 거주하고 있어,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과 협업체 이들에게 안정적인 정착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시행한다.

청주고용센터는 50대 이상 실업급여 장기수급자가 전체 수급자의 50.1%에 달하고 음성·진천 등 인근지역 식료품 제조업의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 중장년내일센터 등과 협업체 50대 이상 장기수급자에 대한 식료품제조업 일자리 재취업을 집중 지원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어촌, 보건의료·복지 등 개선 필요

농진청,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보건의료, 복지 서비스, 기초생활기반, 경제활동 등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학원·어린이집 등의 공급이 부족했다. 반면 농어촌 주민의 삶에 대한 행복감은 크게 향상됐다.

농진청이 31일 발표한 ‘2023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은 5년 전인 2018년보다 가파르게 올랐다. 특히 도시(62.3점→64.0점)에 비해 농어촌 행복감(58.7점→62.2점)이 더 크게 상승해 도시와의 격차를 좁혔다.

반면, 도시와 농어촌의 생활 부문별 중요도와 만족도를 통한 IPA 분석 결과에 따르면 농어촌지역이 여전히 뒤처졌다. 농진청은 “2018년과 2023년 모두 농어촌의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생활기반, 경제활동 여건이 중요도와 비교해 만족도가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복지서비스 부문에서, 농어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영유아 돌봄 시설 확대 등 사업이 추진돼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이용이 늘었으나(48.4→53.6%)

여전히 학원 등 교육 기반 시설과 어린이집·유치원 수가 부족했다.

또 경제활동 부문에서, 한 달 생활비를 도시보다 적게 지출했으나 증가율은 도시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수산물 가공(43.5→16.5%)이나 농수산물 직거래·지역 먹거리(로컬푸드)(46.5→25.0%) 등 농어촌 융복합 사업 참여 의향이 감소했다.

보건의료 부문에서, ‘농어촌 응급 의료 기관 시설 확충’ 등으로 응급실 이동 시간이 2018년 25.5분에서 2023년 23.8분으로 줄었다. 구급차 이용률은 26.2%에서 35.8%로 늘었다. 농어촌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병의원이었으며, 공공의료기관 이용률은 39.4%에서 27.5%로 줄었다.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주민 이유는 예방접종(35.1%), 건강검진(17.4%) 등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확충 등에도 도시에 비해 만족도 등이 낮게 나타났다.

농진청은 국무총리 소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위원회’에 조사결과를 안건으로 보고한 뒤 농어촌 주민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 근거로 활용된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노사발전재단, 비정규직 고용차별 개선 지원

‘차별없는 일터지원단’ 서비스 시행

비정규직 고용 사업장에 대한 자율적인 고용상 차별 개선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노사발전재단은 31일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차별없는 일터지원단’ 서비스를 4월부터 본격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지난 2010년부터 비정규직 다수 고용사업장의 고용상 차별 요소를 진단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인식 개선 교육과 상담을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차별개선을 돕고 있다.

지난해에는 300개 사업장의 차별개선을 권고한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 1만8516명의 근로조건이 개선됐다. 이 중 임금 상승은 2458명(1인 평균 81만원), 정규직 전환 306명, 파견·사내하도급 등 간접고용에서 직접 고용 전환은 120명이다.

올해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사내하도급 사용 사업장에서의 개선권고 이행률 제고에 집중할 계획이며, 사업장 방문 맞춤형 진단, 온·오프라인 교육과 상담도 지원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韓, 베트남 재활용산업단지 조성 협력

우리 정부가 베트남 북부 자원순환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베트남 정부와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의 현지 수주도 활발해질 것으로 환경부는 전망했다.

환경부는 “지난 25~29일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을 베트남 현지에 파견한 바 있다”며 “베트남 내 재활용산업단지 조성 초기부터 환경부와 함께 기획해 국내기업이 베트남 재활용시장에 진출하는 데 유리한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정부 간 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26일 하노이 소재 천연자원환경부에서

판뚜영총 법제국장과 면담했다. 양측은 판민전 베트남 총리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자원순환산업단지(클러스터) 조성을 우리 정부와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협력약정서를 체결했다.

환경부는 “우리나라 제조기업이 다수 포진한 베트남 북부지역에 자원순환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베트남 내 국내기업들이 안심하고 산업폐물을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자원순환 관련 국내기업들이 베트남 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출할 수 있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